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함께한 교육발전특구 유관기관 협약식이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시장·군수, 대학 총장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인제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유출 막는다

전북특별자치도내 5개 시군이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5개 시·군, 7개 대학, 7개 기업 및 유관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김관영 도지사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 지자체장, 그리고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또한 KCC, 현대차(주) 전주공장, 한풍제약, 대두식품, 캠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유관기관 및 지역기업 7곳이 함께 참여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자치도·교육청·시군·대학·기업 교육발전특구 협약

도지사·교육감 공동위원장으로 지역협력체 구축
익산 지역교육공동체 협업 통한 공공형 보듬 키플링
남원 일체형 교육정주도시·무주 태권도 교육발전 등

을 보태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형별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신청주체인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신청주체인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지사·교육감이 신청하는 3유형이 있다.

이에 전북에서는 3유형으로 전북자치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

안이 공동 신청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익산시는 지역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공형 보듬 키플링 특구 조성 △남원시는 늘봄학교로부터 글로벌 K-산업 일자리까지 일체형 교육정주도시 조성 △완주군은 지역인재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 △무주군은 태권도시주, 무주군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부안군은 국산밀 베이커리 교육·산업 특구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모델을 기획했다.

이들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질

의 공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양성하고, 취업도 지역에서 이루는 선순환 구조로 균형발전 및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지역에서 오는 9일까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중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할 교육발전특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간병비 지원을"

강동화 자치도의원, 오늘 본회의서 5분발언 통해 촉구키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일 진행된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는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간병살인, 간병과산, 간병지옥 등의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 현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 가량으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 국민간병비 부담액은 3조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 약 10조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간병부담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닌 특별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자율학교 확대 필요성·방안 모색

전용태 자치도의원, 전북교사노조 등과 공청회 공동개최
전북특별법에 반영 '자율학교 특례' 활용 방안 등 논의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용태 의원(진안)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옥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장승초등학교 이영상 교장의 '자율학교 확대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마령초등학교 안중만 교사, 정재석 위원장, 송옥진 지부장이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과 최규실 장학사, 중등교육과 김태희 사무관, 유초등특수교육과 조경운 장학관, 교원인사과 김명원 장학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자율학교 특례를 기반으로 전북만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학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송옥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교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자율학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편적인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KBS 사장을 현직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 배치를 위해 단체협약이 정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마저 무력화시키며 인사 횡포를 자행하며 방송법까지 어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집행액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 공평하게 50%씩 나눠 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앞서겠다고 약속했다.

방송 앵커 출신인 정동영 예비후보가 지방소멸시대에 지역의 미래비전과 담론을 이끌어내갈 지역언론 역할 강화를 위해 전령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검찰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KBS 박민 사장은 이른바 철 지난 '맹진뉴스'를 '뽕뉴스'로 부활시키고 공공성 높은 시사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를 사전 예고도 없이 교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홍보 방송에 앞장설 건

실제 KBS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뒤 시사 프로그램 일방 폐지, 뉴스앵커 교체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보도자문단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관련 TF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변인 선발에 지원했던 인사 등이 포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협력제작국 등을 이끄는 시사제작본부장에 과거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게시물 공유 등으로 비판 받았던 라디오 PD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정 예비후보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정에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담론은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주를 받아 약탈적 사유화를 일삼는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이여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북, 생명경제 실현한다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의결
7개 부문 72개 과제 마련... 2030년까지 43% 감축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민간공동위원장 임성진 교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576만톤 대비 1,108만톤, 43%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가 목표 40%보다 높은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자체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의지와 목표달성을 위해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그간 도는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탄소중립포럼(8회), 도민설명회(3회), 찾아가는 직능·사회단체 의견수렴(14회) 등 전문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 어왔다.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마련하자는 도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에 반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정책기반 등 7개 부문 72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전환·산업 부문이 포함될 것으로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설 것이라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전환·산업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 새민금 재생에

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과제를 추진해 398만톤(43.5%)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부문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체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ESG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미래산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건물 부문은 탄소중립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주력한다.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등 11개 과제를 통해 296만톤(45.1%) 감축한다.

그린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등 그린카 보급 등 8개 과제를 통해 87만톤(21.2%), 저탄소 농업기계를 통한 농축산 부문은 20개 과제를 통해 113만톤(27.3%)을 감축하게 된다.

그 외 폐기물 9개 과제 53만톤, 흡수원 6개 과제 161만톤, 정책기반 8개 과제 0.6만톤을 각각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본계획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그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탄소중립 전환의 과정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전환, △농생명융합, △바이오융합, △생태계서비스, △친환경자원순환의 전북자치도형 5대 녹색성장 선도전략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는 5대 산업이행과 전북자치도 특례를 연계한 특화 전략으로 탄소중립 함께 녹색성장 산업육성에도 주력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우리의 삶과 미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생명경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尹정권 심판 민심 받을 후보 선출 힘 모아"

민주 이덕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덕훈 예비후보(전주을)가 "지금 지역의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 전지역에서 승리해 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전주를 민주당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한 경선과 원팀 구성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대한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이덕훈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즉 실무진 논의를 통해 향후 '원팀 구성'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민들에게 총선 승리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서약식 등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 공천시스템에 기반한 투명한 경선의 장 마련이 시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민주당의 원칙이자

선거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간 네거티브 배제는 물론 인물과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경선 결과에 승복함을 넘어서 통합을 위해 통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시민 공경정선 선언, 네거티브 배제 등 4대 방안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